

한국 불교교단의 개혁과제와 방향

인문대학 국사학과 명예교수 최 병 현

1. 문제제기 - 오늘날 우리 불교교단의 현실 -

오늘날 우리 불교교단은 사찰과 불자 숫자의 증가 등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한국의 불교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는 대승불교의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대단히 많다. 우선 밖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안으로 불교계 내부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불교계 안의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나는 교단의 분열과 파벌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불교계에서는 교리해석상의 이견이나 수행 가풍상의 차이도 별로 없으면서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파벌로 분열되어 세속사회 못지않은 심각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벌 간의 대립과 갈등은 고질화되어 가까운 시간에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이러한 불교계 상황은 불교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세속사회를 정화시키는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사상적인 논쟁이나 수행방법상의 이견과 관계없이 오직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 갈등하는 교단은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실 교리의 해석이나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이견이 노출되어 벌어지는 싸움이라면 불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논쟁은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교리해석상의 문제나 사상적인 문제는 회통불교라는 미명으로 호도하여 버리고, 화석화된 간화선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회피하여 버리고 만다. 그리고 종권의 장악과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모습은 민망하기 그지없는 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재 불교계의 이러한 모습은 불교의 근본정신을 망각한 것이며, 우리 불교의 전통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화합을 강조했던 부처님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화합을 이룬 집단의 모델이 되었던 승가의 이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국가의 발전과 전통문화의 창조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우리의 전통불교와도 관계없는 것이다. 세속화와

어용성의 문제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불교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이제는 세속사회를 정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사회분열의 씨앗이 되며, 현대문화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문화발전을 뒤에서 끌어당기는 문화지체현상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교단의 분열 갈등을 종식시켜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야 하고, '호국불교'의 개념을 바꿔 정치권력과 분리되어 상호간에 견제 비판하는 건전한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불교교단의 화합과 불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분오열된 우리사회를 통합하고 과학만능 물질만능으로 야기된 현대문명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불교의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불교의 근본정신에서 크게 이탈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 불교계의 현실에 대하여 일대 각성을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2. 일제의 불교침략과 식민지불교의 성격

한국근대 불교사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불교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사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경향은 사회경제사에 비하여 사상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특히 불교사 분야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진하였다. 그 결과 일제의 한국 침략사는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만이 강조되었고, 종교 특히 불교를 침병으로 한 정신적 문화적 침투 사실은 전연 간과되었다. 반면 불교학계의 연구는 역사의식의 결여와 일방적인 호교적(護敎的) 자세로 말미암아 일제의 불교침략 사실과 식민지불교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근대 불교사의 연구가 부진한 이유의 이면에는 한국 불교계가 아직까지도 식민지불교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다는 현실이 장애가 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일제는 한국진출을 시작하는 처음 단계부터 정치와 종교는 새의 두 날개, 또는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관계라고 하면서 불교인들에게 한반도 진출을 종용하였고, 일본정부의 식민지 개척과 불교의 해외포교가 일체화되어 추진토록 하였다. 반면 국가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던 일본불교계도 당국의 한국침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호국과 호법의 일치를 표방하면서 침병역할을 자임하였다. 그리하여 부산항이 개항되는 1877년부터 한국을 강점하는 1910년까지 일본의 각 종파는 침략의 단계마다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와서 한국불교인 회유와 사찰 장악에 매진하였으며, 때로는 명성황후의 시해나 한국병합 같은 정치적 침략사건에도 직접 개입하는 등 침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1910년 한국강점의 목적을 달성하자, 불교정책을 변경하여 일본불교를 배제하고,

그 대신 한국불교를 식민통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총독부는 30본말사제를 통하여 한국불교를 분할하여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식민통치에 경쟁적인 협력을 유도하였다. 일본 불교사에서 본말사(本末寺) 관계는 원래 법류상승(法流相承)의 사자(師資)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으나, 이후 교단은 막번체제(幕藩體制)에 상응하여 세속적 논리에 의해 편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불교교단의 본말사 제도 가운데 총본산제도는 삭제하고, 본말사 관계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한국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행정적인 편의주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시대의 선교(禪敎) 양종을 종지로 표방케 함으로써 한국불교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시대의 선교 양종을 종지로 표방케 함으로써 한국불교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30본말사제를 통하여 분할통제방식을 취하면서 조선시대의 선교 양종을 종지로 표방케 함으로써 한국불교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본사주지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는 풍조가 생겨 불교계의 세속화와 윤리적인 타락을 부채질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일지주적인 성격을 띤 사찰주지들을 중심으로 한 대처승의 양산은 해방이후 커다란 후유증을 남겨 20여 년간 비구 대처 간의 치열한 싸움을 유발하여 마침내 불교교단이 분열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일제는 군국주의체제를 구축하면서 분할통제방식을 변경하여 총본산을 새로 설치케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국불교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고려시대의 조계종(曹溪宗)과 태고보우(太古普愚)의 불교전통의 계승을 표방하고, 유교법회(遺敎法會)의 개최를 통하여 선학원 계열의 승려들까지 포섭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명실상부한 통합종단을 설립케 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면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주관과 친일적인 본사주지들의 주도하에 추진됨으로써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국민총동원체제에 부응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의 산물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전시총동원체제에 협조하는 어용적이며, 친일적인 성격의 식민지불교를 형성케 됨으로써 이전의 분할통제방식으로 인한 불행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변질과 왜곡이라는 더욱 심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본말사제라는 분할통제방식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중앙의 통제기관으로 총본산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의 통합관리기구와 지방 본사 사이의 교단행정체계상의 구조적인 모순을 갖게 되었으며, 불교교단의 운영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은 고질화된 어용적인 성격과 함께 해방 뒤에도 청산되지 못하고, 식민지불교의 잔재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위에 고질화된 문중의식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우리 불교발전의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식민지불교의 잔재와 청산과제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를 계기로 하여 촉발된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난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불교계 일각에서는 당시 정화운동의 성과와 주도적인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주역을 담당했던 인물들을 평가하는 작업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교계 현실을 돌아볼 때, 식민지불교(왜색불교)의 청산과 청정승단의 가풍회복을 이념으로 한 정화운동이 얼마나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그러한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하여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해방이후 불교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양적으로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으며, 외형상으로 개선된 점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특히 불교정화운동을 계기로 하여 불교계의 주류가 대처승에서 비구승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사찰과 불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으며, 비구니의 비중과 역할이 커진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불교의 청산과 청정 승풍(僧風)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제대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불교계에서는 식민지불교의 잔재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써 흔히 대처육식의 폐해를 들고 있다. 물론 필자도 불교교단의 여러 현상적인 모순들이 대처 문제에 기원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식민지불교의 잔재는 그보다 훨씬 크고 본질적인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단제도 면에서 전법의 사승관계나 승풍의 전승과는 무관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편제되었던 본말사제도는 제대로 개선된 점이 없으며, 또한 본말사제도라는 분할통제 방식과 총무원체제라는 중앙통제체제와의 교단행정체계상의 구조적인 모순도 본질적으로 시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위에 재산과 종권을 놓고 파벌사이에 싸움을 벌임으로써 세속적인 이해집단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고질화되었다.

교단제도 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순응하고 협력하는 어용적인 성격이다. 해방 이후에도 어용적인 성격은 체질화되어 권력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파벌싸움에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실제 불교정화운동의 발단과 전개과정에서 불교계는 시종 정치권력에 의지하고 끌려 다니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폭력적인 인권탄압에 비판하고 항거하는 교단의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다.

식민지불교의 잔재로써 어용적인 성격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불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게 한 점이다.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역사의식의 결여는 현대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불교철학의 계발을 어렵게 하며, 불교인 자신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역사는 이미 농업사회를 지나고, 산업화 단계를 벗어나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였는데, 불교계는 산업화 이전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의식의 부족은 식민지불교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의 이상과 근본정신은 바뀔 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철학이 끊임없이 계발되어야 하며, 그 변화는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명으로 하여 승가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불교교단의 이상과 현실 - 분열에서 화합으로 -

불·법·승 3보 가운데 불보는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승보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불자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그 정확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승의 뜻을 흔히 스님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것은 전연 그릇된 견해이다. 또한 ‘스님네’라고 하여 다수의 스님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승의 원래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 스님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승(僧)은 원래 범어 상가(Saṅgha)를 소리로 한역한 승가(僧伽)의 줄인 말이다. 상가를 뜻으로 한역하면 중(衆), 또는 화합중(和合衆)이 된다. 따라서 승, 또는 중은 단체를 의미하는 말로써 곧 불교교단, 특히 화합을 이룬 교단을 가리킨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인도에서는 승의 원어인 상가가 불교교단만을 지칭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어 오던 보통명사였다. 즉 상가는 정치적으로는 공화국, 경제적으로는 상인조합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며, 부처님의 교단은 그것을 받아들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상가라는 용어를 왜 자신의 교단 이름으로 삼았을까?

기원전 6~5세기경의 인도사회에서 공화국과 상인조합을 막론하고 상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동일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은 상호 평등하며, 동일의 규율에 복종하고, 그 가입은 자유의지에 따르며, 집단의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의 합의제에 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성은 구성원들 간의 완전한 화합을 목표로 한 점이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화합을 이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화국과 상인조합, 즉 상가의 모습에서 자신의 불교교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보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새로 성립되는 교단의 이름을 상가라고 칭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부처님 당시의 교단은 사문들의 회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결정과정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행해졌으며, 표결방식은 공화국이나 상인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제가 원칙이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모든 사문들의 결정권이 같았고, 서로 대등한 입장이었으며, 교단의 화합이 특히 강조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교단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였을 뿐이고 특별한 지위나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상가에 대한 부처님의 인식과 운영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의 생활 이상은 신분이나 계급의 관념을 없애고 불교도로서의 동일한 일체감을 갖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화합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부처님 교단인 상가의 이상은 완전한 화합의 실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가를 중국에서 한역할 때에 상가를 집단의 의미인 중(衆)이라는 용어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화합이라는 수식어를 부쳐 화합중(和合衆)이라고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귀의 대상으로서의 승보는 완전한 화합을 이룬 교단이지, 분열 갈등하는 파벌이 아님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불교교단은 부처님의 화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동시에 상가의 이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분열 갈등하는 교단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자들의 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정치권력과 불교교단의 관계 - 비판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

연말이 되면 신문이나 방송이 그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었다. 범보신문도 2008년도 불교계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선정된 불교계 뉴스를 보면 유난히 불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뉴스가 많았다. 특히 기독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과 기독교 정부로 지칭될 만큼 특정종교의 편향적 인적구성으로 이루어진 새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하여 도를 넘는 전투적인 선교행위와 다른 종교에 대한 배척을 노골화한 것은 불자들이 분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정권적 차원의 종교적 편향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급기야 지난 8월 27일 전국의 20여만 불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집결하여 범불교대회를 봉행하는 초유의 강경한 대응을 강행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시정을 요구한 불자들의 함성은 당사자들의 사과를 받아냈으며, 마침내 종교편향금지법 법제화 추진의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불교계는 이러한 사과와 대응조치를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종교편향으로 야기된 갈등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의 사태 해결 방식은 근원적인 요인을 덮어둔 채 미봉에 그침으로써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으로 야기된 이번의 사태는 전연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요인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본다. 첫째 요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종교관이다. 그리고 둘째 요인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요인은 전적으로 기독교 측에 책임이 있으며, 불교측은 일방적인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나 둘째 요인은 기독교 측만이 아니라 불교 측에도 자성할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원래 정치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풀어주는 최후의 보루이다. 다양한 견해 차이와 이해관계로 갈등을 보이는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종교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는 사회통합이라는 역할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정치는 현상적인 차원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에 종교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불교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종교이며, 승가의 이상이 바로 화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의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인들의 대응을 보면 불교교단의 화합과 사회통합이라는 승가의 이상과 역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특히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없이 역설적으로 정치권력에 연연하는 모습만을 보여 주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면 정치와 불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 견제하고 비판하는 긴장관계이다. 양자가 유착하면 정치권력의 부패와 폭력을 방관 조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교교단도 부패하고 세속화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양자가 대립 갈등하게 되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게 된다. 이제 정치와 불교는 건전한 관계를 재정립하여 정치권력은 정권안보에 불교를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불교교단의 자주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반면 불교교단도 정권에 의지하고 권력에 연연하는 자세를 버리고 정치권력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비판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